

'좌익효수' 국정원 직원 무죄판결 논란

담당관사 "A씨 댓글 후보 낙선 목적으로 계획적 행동했다고 단정 어렵다"에 "직위 이용 범죄행위" 지적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국가정보원 댓글사건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겐 유죄가 인정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가 좌익효수로 알려진 국정원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원 전 원장 사건에서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국정원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1·2심의 판단을 법원 스스로 부인한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가 21일 호남과 야당 여성 등을 비하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일명 아이디(ID) '좌익효수'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

은 좌익효수의 댓글 행위를 지나치게 개인적 일탈'에 국한해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판사는 "A씨가 선거와 관련해 올린 댓글이 10건에 불과한 점, 선거 당일까지 20여일이 남았음에도 더 이상 댓글을 올리지 않은 점, 과거에도 선거와 관련 없이 여러 정치인을 비방하는 댓글을 올린 점 등에 비추면 A씨가 해당 후보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만큼 능동적·계획적으로 행동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정원 직원인 A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인터넷에서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을

이용해 댓글로 특정 지역이나 특정인을 폄하, 비방했다.

특히 당시 상황이 대선 정국이었다는 점, 일반 시민도 아닌 현직 국정원 직원이라는 신분 등을 감안하면 A씨의 범행을 직위를 이용하지 않은 개인의 단순 일탈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특히 국정원 댓글사건이 공공연히 발생했던 시기에 좌익효수도 함께 활동했던 만큼 충분히 '직위를 이용한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비방할 목적으로 그 같은 댓글을 올렸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선거에 어

떻게든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의심이 조금이라도 들 경우 더 엄격한 판단이 필요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좌익효수' 사건의 경우 처음에는 국정원 직원을 부인하다가 사실임이 밝혀진 것"이라며 "댓글을 올린 시기, '좌익효수'라는 ID를 사용한 점 등에 비추었을 때 선거운동 목적이 아니라고 쉽사리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막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국정원 소속 직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기계적인 판결을 내린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용주기자

도, 발작물 건조·저장 자동화 사업 진행

내년까지 7억 5000만원 지원

전북도가 올해 최초로 발작물 건조·저장 자동화 사업을 펼친다.

21일 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내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7억5000만원을 지원해 맥류와 잡곡 등을 손쉽게 건조·저장할 수 있는 저장 자동화 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사업이 시행될 경우 이제껏 수작업으로 건조·저장하던 작업을 손쉽게 일괄 처리할 수 있어 농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예상된다.

현재 도내 보리, 밀 등 맥류 생산량은 2만5000톤으로 전국(7만8000톤)의 32%를 생산한다.

우리나라 맥류 자급비율이 23%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전북이 식량(맥류)자급권 확보에 기여하고 있는 셈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업관련 법인 또는 생산자단체 중, 발작물 건조·저장 후, 건조·저장·가공 등을 일괄처리 할 수 있어야 한다.

도는 이달 말까지 사업을 신청 받아 평가단을 구성 서면·현장평가를 통해 내달 중 적격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농업인은 발작물 생산에 전념할 수 있어 생산량을 늘려 소득이 증대되고 더불어 보리, 밀의 식량자급률 증가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민형기자

시민단체, 테러방지법안 폐지 촉구

시민단체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테러방지법)에 대해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고 인권과 헌법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법안 폐지를 요구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6개 단체는 21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에게 테러방지법이 테러'라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테러방지법 독소조항으로 지적되고 있는 "군 병력 민간 투입에 대해 "군부대인 국방부 소속 테러특공대를 민간인을 상대로 한 작전에 투입하는 과정에 민주적 통제장치가 없다"며 "경찰청장 등 대책본부장의 요청만으로 특공대 투입을 가능하게 하고 국회에 철수 요청권한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권한 부족' 논란에 대해서는 "국정원 외 테러 위험인물을 알 수 없는 구조에서 국민이 민원을 제기할 방법이 없다"며 "인권보호관의 대테러기구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권한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의 권한 강화도 우려했다. 이들은 "테러방지법 시행령은 테러를 명분으로 국정원에 국가행정기관 전 반을 주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이를 통제할 장치 역시 마련돼있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8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용주기자

오리·거위자기도축 판매금지

오는 6월부터는 가든형 식당 등 가축을 직접 도축해 조리·판매하는 음식점에서 오리와 거위는 금지식품으로 제한된다.

21일 전북도는 가축을 사육해 직접 도축·조리판매하는 8개 축종 중 오리와 거위에 대해서는 자가도축 조리 판매 금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자가조리판매 허용 지역은 188개 188개 읍·면·동에 1,803개 통·리로서 축종은 사슴·닭·오리·거위·칠면조·토끼·메추리·꿩 8종이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전국 가든형 식당에서 사육중인 오리에서 고병원성 A가 발생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차단방역을 강화하고자 앞으로는 오리와 거위를 제외한 6종에 대해서만 허용한다.

다만 가든형 식당에서도 허가된 도축장에서 도축된 식육으로는 조리 판매가 가능하다.

이를 어길시 최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관계자는 "8월 1일부터 가든형 식당에서 오리·거위는 자가조리 판매 제외 대상이므로 부정 축산물 단속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정영수기자

본사인사

▲구인규순창주제기자

명·의원면직

(4월 22일자)



21일 송하진 지사는 순창군에 위치한 도로관리사업소를 찾아 건설공사 관계자들의 품질관리 실무·시연을 참관하는 등 현장행정을 기했다.

송하진 지사 지방도 관리·부실시공 방지 현장행정

도로관리사업소 방문 '건설품질관리 실무 시연회' 실내시험 전 과정 참관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도내 지방도로 관리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현장행정 점검에 나섰다.

이를 위해 21일 전북 도로관리사업소를 방문한 송 지사는 '건설품질관리 실무·시연회'에 직접 참관해 실내시험 전 과정을 살펴봤다.

이날 진행된 품질관리 실무·시연회는 부실시공 방지와 품질시험의 전 과정을 실습하며 현장시스템을 관리해 나가는 과정이다.

각 시·군 건설공무원 및 도내 주

요 건설사업 현장소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실무·시연회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기준과 공정별 사례, 도로 및 교량유지관리와 점검방법 등을 다뤘다.

또한 콘크리트 압축강도, 아스팔트 안정도, 골재의 체가름, 흙의 지지력 시험 등 각종 품질관리 시험을 실무 중심의 역량강화에 중점을 뒀다.

이날 송 지사는 "그간 설계대책, 도로 낙석제거, 포장도 정비 등 도로안

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면서 "도내 지방도로 관리의 중요성과 품질시험을 통한 부실시공방지에 앞장 서 달라"고 말했다.

조산현 도로관리사업소장은 "2010년 순창으로 사업소가 이전 하면서 그간 각지에서 시험의뢰의 장거리 불편사항을 크게 개선해 인터넷 접수와 수수료를 수입증지 대신 무통장입금제로 전환했다"며 "필요시 공휴일 현장시험도 가능토록 4월부터 시행해 나간다고 밝혔다.

/정영수기자

전북 공동발전 위한 시·군간 상호교류 협력 다짐

민선 6기 2차년도 전라북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이진식 김제시장) 제4차 회의가 21일 심민 입실군수 등 도내 시·군 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입실군에서 개최됐다.

이진식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총선이후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숙원사업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아주 많다"며, "하루속히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고 당선자와 낙선자간의 화해와 협력을 통해 지역현안과 민생을 챙기는 일에 다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심민 입실군수는 환영사에서 "대한민국 치즈의 본고장 입실을 찾아준 시장·군수님들을 진심으로 환

영한다"며, "앞으로 협의회가 각 시·군의 공통 현안을 고민하고 실질적인 상생방안을 모색하는 협업과 소통의 창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익산시장 재선가에 당선된 정현을 시장도 참석해 "전라북도의 공동발전을 위해 시·군간 상호교류와 협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보통교부세 산정시 강화된 환경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청정지역 시군의 지역여건을 보정 수요액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하는 등 지역현안에 관한 사항을 집중 논의했다.

/임실=진홍영기자

주간(주말), 야간면접 특강

스피치·시낭송·면접·웃음치료·매직(마술)

◎ CEO, 2%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귀하게 날개를 단다!
◎ 감성과 파워 스피치로 언력(言力)의 시대에 성공의 날개를 단다!
◎ 소통과 감성의 시대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날개를 단다!

<p>〈강의특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40년 지도경험과 노하우로 알차고 재미있는 강의 ② 저명한 교육비로 주1회 교육 ③ 각종 대회 출전지도 (대통령상 3회 국무총리상 2회 배출) ④ 각 분야 전문 강사가 지도함 ⑤ 차명운행(유치부, 초등부)함 	<p>〈김양욱 전담교수 소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 전북대 교양학부 (토론과면접) 겸임교수 · 면접지도 전북1호 강사 · 한국음변인협회 전북회장 · 한국스피치&리더십컨설팅 대표 · 스피치&리더십 경력 40년 강사 및 스피치 칼럼리스트 · 저서: "35년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만말 "스피치노하우" 등
---	--

※ 부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일반부, 면접지도, 개인지도, 주말반

(사)한국음변인협회, (사)한국음변단체총연합회 부설
한국 스피치 & 리더쉽 컨설팅
한국 스피치 & 면접 아카데미

위치: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번지(시청 옆 대우빌딩 건너편 5층)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